

실용 정부의 대북 정책 평가와 과제

김 영 수 / 서강대학교 교수

실용 정부의 시각

‘바른 출발이 빠른 길’. 여기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은 시작한다. 잘못된 출발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급하다고 잘못된 시작을 택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이 생각은 매우 단호하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란 말도 여기서 나왔다.

지난 10년처럼 대북 정책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시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실용 정부’는 대화 우선의 형식적 남북 관계를 지양하고 실질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맞선 북한 당국은 6.15와 10.4의 계승과 관철을 요구하면서 남북 관계의 출발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취임 1년을 앞둔 현재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 보다 예측하기 쉬운 경색 국면에 놓여 있다.

원칙과 이념을 앞세운 대북 관계 운영 방침으로 인해 남북 관계가 틀어진 것이 ‘not bad’, 즉 아주 나쁜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이 실용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이런 실용적 생각에 대해 국민여론이 일면 수긍하면서도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함께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현재 실용 정부가 안고 있는 고민이자 풀어야 할 숙제다.

최근엔 대북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전문가들의 성명까지 나올 정도로 대북 정책

전환 요구는 세가 확산되고 있다. 국민들도 남북 관계를 예전처럼 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 그렇다고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는 것은 싫다는 태도다. 또 남북 관계를 시끄럽게 끌고 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태도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원칙과 이념을 앞세운 이명박 실용 정부의 단호한 태도를 지지하는 층과 함께 이를 싫어하는 또 다른 실용 세력도 세를 불려가고 있다.

빼라(전단지) 문제는 실용 정부의 실용성을 체크하는 중요한 계기였다. 뿌리자 말자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서 빼라를 뿌리는 탈북자 단체를 민주당 의원이 매국노로 매도할 정도로 대북 정책은 정치적 영역 안에 이미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남남갈등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다.

북한의 태도

북한 당국은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 ‘패당’, ‘협잡꾼’ 등 입에 담기 어려운 비난을 수없이 쏟아놓고 있다. 취임 이후 탐색하던 태도를 버리고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적개심을 고취시켜 체제 결속을 꾀하려는 듯한 기세다.

북한 당국은 한동안 우리 정부의 ‘비핵·개방·3000’을 낱알이 들춰가며 비판의 학습을 전개해 왔다. 남의 국민 소득을 제 맘대로 3천 달러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제 주제나 파악하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반응은 예상 외로 이명박 대통령이 자기들 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들어준다는 식으로 나타났다. 당황한 북한 당국은 ‘비핵·개방·3000’ 비난식 학습을 즉각 중단하고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비난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한 달 월급이 암시장 시세로 1달러인 주민들에겐 우리 사회에선 인기가 없는 ‘비핵·개방·3000’이 복음의 소리로 들렸던 모양이다.

현재 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장군인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관심을 부쩍 기울이고 있다. 전혀 이상 없음을 보여주려는 북한 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사

회 반응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신의 지도자가 이미 사망한 게 아닌가라는 소문도 심심치 않게 돌고 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상층부 당 간부들의 심경은 훨씬 더 복잡하면 예민하다.

자신의 지도자 건강 이상이 감지되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는 현재 '강경일변도' 이외엔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없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어느 누구도 개방이나 관계 개선을 꺼낼 수 없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후계자 문제를 현명하게 다뤄 보자고 꺼내는 어리석은 간부도 없다. 이런 강경일변도 분위기는 현재 남북 관계를 구속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남북 관계 전망

바른 출발과 원칙을 중요시하는 실용 정부의 태도와 강성 발언 외엔 다른 의견이 제기될 수 없는 북한 내부 분위기를 고려할 때 남북 관계의 해소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 같다. 더욱이 북한 내부 사정으로 인해 타도의 대상을 체제 밖으로 돌리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가능성은 제로다.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북한이 제 풀에 지쳐 도와달라고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초조한 것은 북한이지 우리가 아니라는 전략적 판단도 곁들이고 있다.

현재 상황은 우리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후 탐색전 차원에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 당국을 비난하던 예전 양상과 전혀 다르다. 행위자가 노력해서 풀 수 없을 정도로 남북 관계를 둘러싼 구조가 새롭게 형성돼 있다. 남북 관계를 풀려는 행위자의 노력으로는 구조 자체를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새로운 남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변수가 등장하기 전에는 남북 관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용 정부의 과제

문제는 구조가 딱딱하다고 해서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을 그대로 방치하도록 국민들이 놔두질 않는 데 있다. 2009년마저 기다리면서 북한 당국이 진정성을 갖고 변화할 때를 기다리는 실용 정부를 원치 않는 것이 실용 정부의 당면 과제이다.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과 정책이 제시되지 않으면 집요한 비판에 직면할 것이 틀림없다. 이산가족 상봉조차 외면하면서 남북 관계를 이렇게 끌고 가야 하느냐는 원론적 요구부터 남북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라는 옛 정서에 익숙한 친북세력의 매도와 비난을 감당해내야 한다.

실용은 움직일 때 빛이 날 수 있다. 근본과 원칙을 강조하는 신념만으로는 국민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수 없다. 지난 1년 동안 대통령이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북한을 바라보는가를 익혔다면, 이제부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구상하며 설득하는 지혜와 홍보가 필요하다. ‘비핵·개방·3000’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다고 상생과 공영의 틀로 뒤집어 씌워놓고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비핵·개방·3000’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process)라고 재해석해보았자,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해석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일반 국민들의 정서를 움직일 수 없다.

햇볕 정책의 햇볕을 평양에 내려쬐인다고 하지 말고 애초부터 얼어붙은 남북 관계를 녹인다는 철학에서 시작하고 홍보했다더라면 ‘대북 포용 정책’으로 또 ‘민족 화해 협력정책’으로 명칭 바꾸는데 그 많은 시간과 노력을 바치지 않아도 됐다. 그리고 그 많은 변명과 억지가 필요 없었다. 이 점을 실용 정부는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가 생각보다 적다고, 전문가들이 적극 호응해주지 않는다고 실용 정부의 대북 정책 모토나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

대신 대북 정책의 신념과 의지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과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신념과 의지만 믿고 기다리는 정부를 국민들은 실용 정부라고 부르지 않는다. 대북 정책을 실용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조직이 있음을 보여

주어야 국민들은 수긍하고 지지한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가를 보여주어야만 실용 정부의 실용성을 인정한다. 고집과 일관성만 있다고 실용성을 보전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북한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실용 정부의 정책은 지지를 얻어낼 수 없다. 북한 당국의 변화를 유도하고 촉구하는 정책과 함께 북한의 민심을 얻는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외면해서는 통일과정을 순탄하게 끌고 가기가 어렵다. 통일의 당위성과 가능성을 마음의 통일과 사람의 통일에서 찾는 정책적 의지를 보이지 않고서는 대북 정책의 철학을 도출하기가 어렵다.

남북 관계가 경색됐다고 해서 마냥 기다릴 수 없다. 대북 정책의 실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김정일 건강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다. 붕어빵에 붕어가 없을 수는 있지만, 실용 정부에 실용이 없다는 말은 들을 수 없지 않은가. **統**